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다짐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 정치권·행정 '예산 확보 원팀'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지역발전 '한목소리'

기재부 2차 예산심의 앞서 전북 주요 쟁점사업 설명·지원 요청

14개 시군, 지역 현안 50건 건의... 도-정치권 공동 대응체계 가동

전북의 정치권과 행정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군이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실현에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에 앞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산 반영을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재부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인 입장을 보이는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의한 사업은 모두 50건. 인공지능(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조성,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건립 등 미래 전략산업과 관련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는 전북의 신성장동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주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태권도 위상 강화를 위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조성사업이 주목된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 문화 인프라 확대는 물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가어항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 재난안전 클러스터 구축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예산 반영이 절실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세수 여건 악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회복 기대 속 재정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예산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만큼, 남은 2개월 동안 지역 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이 첫번째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유력하다"면서 "우리도는 RE100 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금엔 전북의 전환점으로 국가예산의 초석이 될 새정부 국정과제에 우리도 핵심현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도·시군이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정현을 익산시장도 "14개 시군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등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정치권·도와 유기적인 대응체계가 빈틈없이 활동 중"이라며, "8월까지 이어질 기재부 예산편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북은 국회, 도정, 시군이 하나 된 '예산 원팀'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 "이재명 정부 성공·전북발전 위해 최선"

민주 김윤덕 의원, 국토부장관 후보자 지명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사진)이 이재명 정부 1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김윤덕 국토

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장관 지명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며 "중요한 시기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 출생인 김 후보자는 전주 동양고등학교, 전북대 상과대학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시민행동21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시민운동을 했고, 2012년 제19대 총선 전북 전주갑에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19·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선 이재

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 총선에선 조직사무부총장, 대선에선 당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지난해 22대 총선과 올해 대선 승리를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정활동은 초선 의원이던 19대 국회 후반기와 재선이던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했다. 22대 국회에선 1호 법안으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균형발전에 관심을 쏟았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호흡을 맞춘 친명 실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인 이상경 1차관과 함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윤덕 후보자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전주대·호원대 글로벌대학 본지정 총력

### 정치권·지자체·대학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대학교와 호원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본지정 선정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회의원, 14개 시군 단체장, 전주대·호원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사진 4면〉

이번 간담회는 올해 전북에서 유일하게 예비지정된 전주대-호원대(연합형)가 본지정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혁신이 지역소멸 대응, 청년 유입, 산업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열린 도-시군-대학 간 업무협약식에서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는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강화 △청년 일자리 및 정주여건 개선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등 실질적인 실행과제가 담겼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전주대-호원대가 추진 중인 'K-Life STARdium' 캠퍼스 실현과도 긴밀히 연결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호원대 연합 글로벌은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8월 1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글로벌대학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후반기 출범 1주년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